

충남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김 영 규(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

- 친환경농업이 꽃을 피울 시간이지만 충남의 준비 정도는 여전히 겨울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
도시민 59.8%, 농업인 52.4%, 전문가 42.2%

1. 실태분석

1) 한국 친환경농업의 배경

- 전 지구적 환경위기, 기상이변, 식량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 환경과 농업의 가치 재평가. 양적성장 및 생산 위주의 농업에 대한 반성,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넘어 필연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전염병 발생, 고투입 · 고산출 · 고밀도 생산 및 소비방식에 대한 반성,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민 ·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으로의 전환

2)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10%이상으로 증가. 2009년 기준 친환경농업 농가수 비중 전체대비 16.6%, 출하량 비중 13.1% 면적 비중 11.6%. 틈새시장 → 주류시장으로 진입
- 생산규모 증가율이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50% 이상 고속 성장
- 시장규모 2000년 1,500억원 → 2010년 3조 6,506억원 24배 증가
- 2000년도 2009년 비교
 - 농가수 2,448호 → 198,891호 81배증
 - 면적 2,039ha → 201,668ha 99배증
 - 생산량 35,406톤 → 2,357,774톤 67배증
- 높은 저농약 비중. 행정주도 통한 급성장, 생산과잉, 가격경쟁 격화

3) 충남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 충남 경지면적 237,681ha의 6.5%, 무농약 이상 1.5%
- 충남 농가 158,528호의 6.1%

- 2009 충남/전국/전남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 현황 비교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건수 (건)	충남	1,678	199(11.9%)	662(39.5%)	817(48.7%)
	전국	24,128	2,520(10.4%)	10,880(45.1%)	10,728(44.5%)
	전남	7,600	414(5.4%)	3,392(44.6%)	3,794(49.9%)
농가수 (호)	충남	9,663	1,427(14.8%)	1,602(16.6%)	6,634(68.7%)
	전국	198,891	9,403(4.7%)	63,653(32.0%)	125,835(63.3%)
	전남	110,385	1,193(1.1%)	37,246(33.7%)	71,946(65.2%)
면 적 (ha)	충남	15,521	1,581(10.2%)	1,400(9.0%)	12,540(80.8%)
	전국	201,688	13,343(6.6%)	71,039(35.2%)	117,306(58.2%)
	전남	104,682	2,745(2.6%)	40,015(38.2%)	61,922(59.2%)
생산량 (톤)	충남	187,834	15,053(8.0%)	32,495(17.3%)	140,286(74.7%)
	전국	2,357,774	108,810(4.6%)	879,930(37.3%)	1,369,034(58.1%)
	전남	1,275,304	14,134(1.1%)	580,347(45.5%)	680,823(53.4%)

- 농가수 : 전남(110,385) > 경북(26,610) > 경남(15,148) > 전북(11,937) > 충남(9,663)
- 면적 : 전남(104,682) > 경북(23,318) > 충남(15,521) > 강원(14,889) > 전북(12,563)

- 유기인증 농가, 면적, 생산량에 있어 충남이 전국평균 상회 / 저농약인증 면적, 생산량 전국평균 상회
- 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시장접근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은 무농약 층이 낮은 문제 : 인증수준 향상의 필요성
- 2010년 충남 인증면적 상위 5개 시군 인증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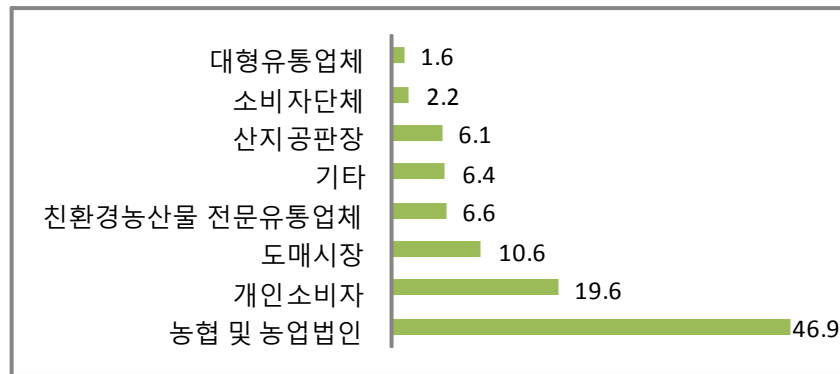
시 군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비율		
					유기	무농약	저농약
부여	인증건수(건)	10	98	150	3.9%	38.0%	58.1%
	인증농가(호)	28	176	1,774	1.4%	8.9%	89.7%
	인증면적(ha)	31.4	146.9	3,988.9	0.8%	3.5%	95.7%
	생산계획량(톤)	621	4,743	25,964	2.0%	15.1%	82.9%
공주	인증건수(건)	18	90	93	9.0%	44.8%	46.3%
	인증농가(호)	38	296	1,078	2.7%	21.0%	76.3%
	인증면적(ha)	154.3	264.1	2,983.7	4.5%	7.8%	87.7%
	생산계획량(톤)	4,322	3,673	13,892	19.7%	16.8%	63.5%
청양	인증건수(건)	5	58	44	4.7%	54.2%	41.1%
	인증농가(호)	52	153	1,066	4.1%	12.0%	4.1%
	인증면적(ha)	68.4	221.6	2,650.1	2.3%	7.5%	90.1%
	생산계획량(톤)	365	1,511	6,626	4.3%	17.8%	77.9%
아산	인증건수(건)	37	23	44	35.6%	22.1%	42.3%
	인증농가(호)	374	74	177	59.8%	11.8%	28.3%
	인증면적(ha)	379.0	99.3	288.4	49.4%	13.0%	37.6%
	생산계획량(톤)	4,864	2,360	9,088	29.8%	14.5%	55.7%
홍성	인증건수(건)	17	20	13	34.0%	40.0%	26.0%
	인증농가(호)	590	85	49	81.5%	11.7%	6.8%
	인증면적(ha)	599.5	62.3	60.1	83.0%	8.6%	8.3%
	생산계획량(톤)	10,144	1,845	1,863	73.2%	13.3%	13.4%
충남	인증건수(건)	195	669	765	12.0%	41.1%	47.0%
	인증농가(호)	1,386	1,655	6,492	14.5%	17.4%	68.1%
	인증면적(ha)	1,592.2	1,499.4	12,424.7	10.3%	9.7%	80.1%
	생산계획량(톤)	25,817	143,775	132,804	8.5%	47.5%	43.9%

- 저농약 밭 인증 : 131개 인증(1,629) / 3,078농가(9,533) / 9,209ha(15,516) / 20,067톤(302.396) 괄호 안은 충남 전체
- 상위 5개 지역의 충남 대비 비중 : 건수의 44%, 농가의 63%, 면적의 77%, 생산계획량의 30%
- 아산 + 홍성의 유기인증과 충남 대비 : 건수의 28%, 농가의 70%, 면적의 61%, 생산계획량의 58%
-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육성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고, 행정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대비가 극명

4) 유통시장

- 초기 한국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도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로 유지되고 발전. 1990년대 초반까지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의 대부분은 도시의 소비자생활협과 직거래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최근 생협이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유통비중은 낮아지고 일반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급식이 도입되면서 시장관도의 큰 변화 예상

- 국내 친환경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주 거래처 비중 (2005 농림어업총조사)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시장규모	31,927	34,117	36,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3
전년대비 증가율		6.9%	7%	8.70%	7.3%	9.2	-12.5%	

- 2016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일시적인 시장축소가 이루어지겠지만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시장 거래규모의 19.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전통시장이라할 수 있는 생협 및 친환경매장 시장규모 6천억원대 규모 추산
- 학교급식 시장규모 : 식재료비만 2조 7천억 원 규모
- 전통있고 안정화된 소비자단체, 생협 등은 매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진입 문호도 좁은 편이며, 시장확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충남의 경우 급식 및 일반유통시장의 확대를 통한 접근이 현실적. 유기농업 중심, 생협시장 유통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개발 필요
- 시장전망은 대단히 밝아서 (수치상) 친환경농업 확대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

5) 친환경농업 조직육성 현황

- 한국 친환경농업의 특성은 민간이건 행정주도형이든 집단형 단지, 조직적 협력, 지역단위 생산
- 2009년 말 기준, 충남의 농업법인 1,060개로 전남에 이어 2위. 친환경농업 관련법인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음. 친환경농업 조직화는 초기단계로 판단
- 충남도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업 경영체에 상근 실무자와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상황(예컨대 급식을 위한 잉여농산물 집계 불가, 농가연결 주체 부재)
- 농업의 특성상 실제 생산과 그 외의 업무(생산관리, 물류, 마케팅, 회계 등)를 역할분담하지 않으면 규모화, 안정적 생산 난항. 특히 친환경농업은 생산관리가 성장의 관건. 친환경농업의 성공모델로 언급되는 생산자조직, 지역을 살펴보면 ① 안정적인 유통 시장 확보 ② 실무자 조직을 통한 생산관리라는 공통적인 특성. 상근실무자의 역량, 수준이 대단히 중요

6) 예산

- “2020 충남 농어업 · 농어촌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12년간 총 19조 3,250억원, 친환경농업 분야에 총 7,802억원(연평균 650억원)을 투입.(국·도·시군비, 융자, 자부담포함)
- 2010년 기준 충남 농어업 총예산 6,072억원 중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11%인 667억원 → 2011년 친환경농업 예산 402억원으로 -40% 축소

* 참고. 전남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2010~) : 연평균 3,324억원 투입(지원조건 : 국비는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지방비는 가급적 친환경농업실천 단체 등에 우선)

사 업 명	사업량	재 원 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친환경농업분야(14개사업)		40,196	27,122	3,764	6,797	2,51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개소	750	300	90	210	15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신규)	1개소	1,000	400	120	280	20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000ha	763	382	114	267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26천톤	14,784	11,760	1,512	1,512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0천톤	12,600	9,000	1,080	2,52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0,000ha	5,200	5,200	-	-	-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지원	1식	10	-	10	-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200건	360	-	54	126	180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지 지원	5,400권	43	-	13	30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지원(신규)	14개소	100	-	20	50	30
유기농 채소류 생산단지 조성(신규)	5개소	1,500	-	300	750	450
친환경 농자재 지원	2,222ha	2,666	-	400	933	1,333
자가미생물 배양기보급(신규)	500대	340	-	51	119	170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	1,000건	80	80	-	-	-

* 광역시도별 농업분야 예산 및 친환경농업예산

(단위 : 백만원)

시 · 도	연도	농업부문예산	친환경농업예산	비고
충청남도	2007	456,876	155,042	
	2008	554,567	109,723	
	2009	565,675	47,534	
	2010	607,200	66,710	
	2011		40,196	
전라북도	2007	502,654	42,535	
	2008	791,000	46,871	
	2009	619,207	61,438	
전라남도	2007	623,360	215,539	
	2008	628,972	296,100	
	2009	355,536	94,704	
경상북도	2007	537,781	34,586	
	2008	514,185	200,185	
	2009	778,026	261,805	

- 충남의 친환경농업은 예산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의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구색 갖추기, 끼워 넣기, 나눠주기, 집중도 선택도 없는 평이함
- 예산 수립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절실(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인증제도 변화 등)

2. 충남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의 이유
 - ①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불확실하다 36.5%
 - ② 관행농업에 익숙하여 전환하기 어렵다 30.2%
 - ③ 친환경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 26.4%

* [전남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 관행농가 중 친환경농업 실천의향이 있는 농가 : 89.2%
- 실천 희망이유 : 미래농업 대안(59.5%), 환경문제 해결 사명감(18.9%), 주위농가 권유(13.5%), 유관기관 추천 등(8.1%)
- 관행 → 친환경농업 전환시 애로사항 : 판로확보(소득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

원부족

○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① 노동력 투입 평균 28.4%, 생산비는 평균 17.7 증가

② 생산량은 평균 23.4% 감소

③ 판매가격은 평균 13.2% 증가, 수익성 4.9% 증가

1) 강력한 드라이브와 중장기 전략

○ 다양한 농업의 한 분야라는 인식 : “2020 충청남도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에서도 중심이 아니며 10개 과제별 추진계획 총 36세부 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취급

○ 충남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문제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2010년 10월 20일 충남도민정상회의에서 충남도정 10대 전략과제로 채택된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식품체계 구축(3순위)”, “친환경 무상급식(4순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1순위 :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 현재(도시민 52.1%, 농업인 70.3%, 전문가 84.4%)

- 미래(도시민 48.2%, 농업인 32.1%, 전문가 67.2%)

○ 정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차세대 녹색성장의 동력원”으로 인식 전환에 주목할 필요

○ 전남의 괄목할만한 성적은 전남도정의 핵심, 농정의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 조직, 지원을 집중했기에 가능. 전남은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교육 · 홍보 및 평가, 저탄소 자원 순환 농업실천 기반구축, 표준농법 및 농자재 보급,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농업확산, 친환경농산물 가공 · 유통 수출촉진,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6개 핵심과제와 그에 따른 80개 세부단위사업을 진행

⇒ “충청남도 전역을 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단기적, 선심성, 일회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 발전대책과 강한 드라이브 필요. 농업을 통한 충남 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식량자급률 향상과 같이 뚜렷한 목표 수립. 기존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2) 선도주체 육성 : 친환경농업 조직육성

○ 행정주도 보다는 민간주도 지향. 민간 거버넌스가 체제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농

업인 (조직)역량을 성숙시키고 자생력을 강화, 지원과 보조에 대한 의존도 저하시키는 방향

- 지역단위 소규모 생산자조직 육성 보다는 광역적인 조직화를 모색함으로써 대안적 농업체계 구축 지향
- 광역적 친환경농업 조직화의 필요성
 - ① 유통의 규모와 집중화에 대응 : 생산자간 · 지역간 경쟁은 가격교섭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급식시장도 시군단위 품목 및 물량으로는 대응 불가.
 - ② 생산비 절감 : 인증, 농자재 공동구매 등
 - ③ 시군을 넘어 효율적인 사업 모색으로 중복 과잉투자 및 지원 배제
 - ④ 농업인 내부 기술교육 및 교류 : 현장성 있는 기술교류 및 교육 통해 신규진입의 애로 극복하고 생산능력 및 친환경 인증수준 향상
- 무차별적, 비조직적 생산확대는 인증사고 및 생산계약 위반의 가능성을 높임 ⇒ 친환경농업은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인증사고는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

3) 유통 확대를 전제한 생산 확대

- 유통대책 없는 무분별한 생산지원정책에 따라 시장경쟁 격화, 산지가격 지속하락
-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 폐지. 인증수준 향상 및 신규 확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관행농업 대비 노동력 및 생산비 투입 증대, 생산량 감소 때문에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유통에 대한 대책(계약생산) 필요
-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하는 한국 친환경농업의 역사 이래 최대의 시장 확대이자 기회. 충남 내부의 급식을 넘어 수도권 및 도시지역 급식 공급기지로서의 준비 박차
- 충남 생산자의 광역적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품목생산, 철저한 생산 및 인증관리, 물류 및 유통 시설, 연중 공급을 위한 수매 시스템 및 자금 등 급식을 위한 도 단위 지원 및 준비 시급

4) 6차 산업으로 육성

- ① 친환경 농산물도 가격경쟁으로 생산비를 보장받기 어려울 정도로 점차 하향,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 현재 농업경영체의 수준은 자본, 기술, 전문인력, 유통능력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소규모 가공 지원 사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 ② 농업을 1차 산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식품 · 가공 · 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하여 육성 필요. (농식품부. 가칭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 ③ 가공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작목반, 영농법인, 지역으로 분산 지원하는 방식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 지양. 시장대응 가능한 규모로 묶어 광역적 접근 필요.

기존 시설 및 식품 가공 관련업체들과의 충남 친환경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직해 효율성 재고

5) 충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

- 친환경농산물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기본
- 철저한 생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서 급증하고 있는 인증사고 예방
-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민이 우선 소비할 수 있는 자급체계의 구축(충산충소) 이야말로 충남 친환경농산물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단체, 공공기관, 기업, 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 조직화. 순환경제 구축 방안.
- 도농교류에 대한 지원 필요 : 도시민 · 급식관련 소비자 등을 유치하여 인식을 재고하는 행사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교류 및 교육 진행 실무자, 강사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도립 도농 교류교육 연수원)

6) 그밖에도...

- 자원순환농업구조 지향. 정부의 양분수지 관리 계획(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 실시), 친환경축산의 필요성과 경종순환, 생산비 절감...
- 공무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필요,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낮은 전문성 개선 필요
- 친환경농업의 필연성과 가치에 대한 논리개발 필요성

7) 목표 설정은 ?

* 충남도의 인증면적 현황과 확대목표(무농약 이상)

- 충남 : 경지면적(237,681ha) 대비 2010년 1.3%(2,981ha) → 2020년 15%(35,652h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생산계획(ha)	3,565	4,278	5,229	5,942	7,130	11,880	35,652
생산비율(%)	1.5%	1.8%	2.2%	2.5%	3%	5%	15%
전년대비 증가면적(천평)		2,139	2,853	2,139	3,564	14,250	71,316
면적증가에 따른 필요농가수		438	584	438	730	2,918	14,605

- 정부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12%로 확대(유기 3%, 무농약 9%)
- 전남 : 2014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45%로 확대(유기 15%, 무농약 30%)
- 충남의 친환경농업의 발전 또는 확대를 위한 준비 정도에 맞춰 목표 설정

3. 시급한 과제

- 충남 친환경농업 (거버넌스) C/T 필요
 -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 필요
 - 범 부서간 협력 필요. 생산 / 가공 / 유통 / 교육 / 정책 / 경종 / 축산 → 현장에서 상호관련성이 밀접하지만 행정의 통합성, 일관성, 연계성 떨어짐
 - 중장기 전략 수립과 사업실행에 대한 논의구조 필요

- 인증관련 지원필요
 - 201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민간기관 이양 및 축소에 대한 대안 수립 필요
 - 농관원 인증이 신규는 가급적 배제, 재인증 유지 수준이어서 신규진입농가들의 혼선발생
 - 민간인증의 경우 국가인증에 비해 인증비용 상승, 소비자인지도 낮음
 - 도내 인증기관 육성, 현장 밀착 인증관리 유도

- 친환경 무상급식
 - 도내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농도 충남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유통확대를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 급식 공급 준비 시급
 - 광역적 생산망 확보, 필요물량 수주(영업), 작부계획 수립, 생산 안배, 생산 및 인증관리, 공급시스템 수립 등 필요

도시지역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案)

1.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

□ 도시지역

-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는 농업과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이윤구조를 배제하고 계약생산과 직거래를 지향해왔지만 자율행정,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의 문제 등으로 공급자간의 경쟁구조를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도시지역 구청단위로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 농후
- 도시지역 소비자 및 학교, 지자체의 농업에 대한 이해부족, 농업인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 농협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 ▷ 직거래의 차별성 부각의 어려움
- 전자입찰 배제, 직거래 및 계약의 광역화(학교 단위▷자치구▷교육지원청), 현물 공급체계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간 거래, 구매자금 협력 등에 대한 지향 강조 필요

□ 산지

- 준비 부족 : 지자체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제 주체의 이해 및 준비 부족(초기 논의 단계), 친환경농산물 불비(미계약 시 생산 불가의 특성), 직거래 주체로서의 농업인 조직 미숙
- 수공급 체계와 주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산지 지자체들은 손쉽게 농협 또는 기존의 유통업자에 의존하거나 위탁할 가능성 높아져 농업인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자로 전락하고 경쟁에 따라 가격하락 가능성 농후

2. 도시지역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방안

① 고려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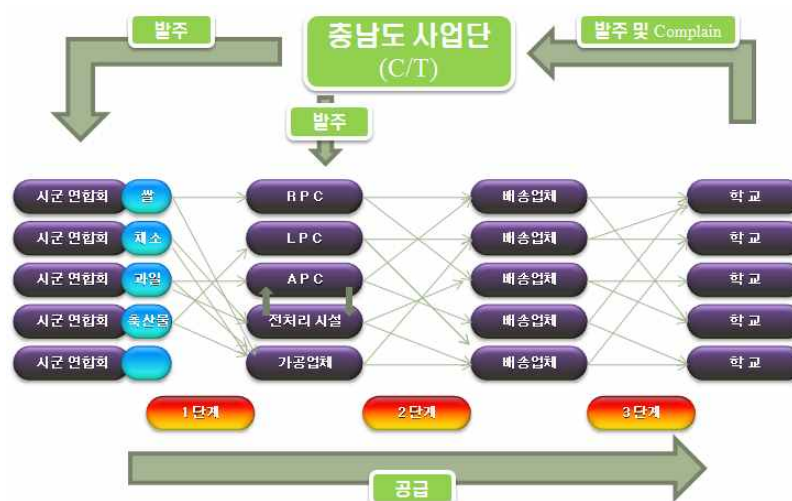
- 공급주체 : 공익성 및 공공성을 공인받은 조직의 필요성. 현 단계에서 광역지자체의 공인을 받은 생산자 조직, 또는 거버넌스 조직을 통한 주체 수립 필수.
- 주도세력 : 친환경농업인들이 거버넌스 및 공급의 중심주체. 급식유통업자 및 일부 농협이 경쟁을 부추기고, 농산물 덤핑 등 부정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향후에도 경쟁 속에서 기존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성 견지할 필요
- 생산관리 : 친환경농업은 대부분 계약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친환경무상급식 시장의 확대에 따라 신규농업인들의 진입이 확대 ▷ 인증사고 및 계약불이행 사고의 가능성 증대 ▷ 교육과 생산관리를 보다 고밀도로 진행할 필요

- 농업인 직거래의 차별화 :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한 최고의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단계축소를 통한 가격안정화, 도농교류○농촌체험○자매결연○학교텃밭 사업 등 농업인 직거래의 특성 및 강점부각 필요

② 거버넌스 기구

- 명칭 : (가칭)충남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지원사업단, 또는 충남 친환경 급식사업단 등
- 내용적으로 이 기구는 친환경무상급식만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워가기 위한 기구로 기능
- 도지사 직속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설립하고 이 기구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향후 설립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부이므로 센터 설립 후 센터로 편입 가능
- 역할 : 충남 친환경농업의 발전전략 수립, 생산실태 현장조사, 작부계획 수립 및 생산안배(계획생산), 생산 및 인증관리, 계약, 구매, 충남 친환경농축산물의 홍보, 시장조사, 마케팅, 브랜드, 도시지역 학교급식 공급업무, 도내 급식관련 시설 및 조직 네트워크 및 관리 조정,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의식 및 기술 교육 등 수행
- 생산관리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들을 공채하여 구성. 업무총괄단장 1인, 생산지원 2인, 유통지원 2인, 총무 1인, 교육홍보 1인으로 민간에서 구성하고 관련 행정부서에서 약간 명 결함
- 철저한 생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 및 혼입사고 발생 가능성, 계약위반 사고 가능성, 시장 확보를 전제로 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가능성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
- 기대 효과 : 친환경농업인들의 조직화로 자생력, 자구력을 향상, 친환경농업 확대, 소득증대, 환경보존,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 실현, 유통과정 축소로 친환경급식 비용 절감, 친환경 충남 건설

③ 공급체계



- 사업단 : 컨트롤 타워 기능. 생산관리 및 도내 시설 및 조직을 네트워크, 협약체결, 컨트롤. 수발주, 컴플레인 대응 및 해소, 정산업무 등 수행(농업경영체 형식으로 추진 검토)
- 시군 연합회(생산자 및 단체) ▷ 도내 시설 및 조직 ▷ 배송업체 ▷ 학교 : 농산물의 3단계 이동
-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역할 : 시군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사업단으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입고
- 도내 유관시설 및 조직 : 도내에 현존하는 농업인단체, 농협 또는 일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RPC, APC, LPC, 전처리시설, 가공업체, 보관고 등을 계약, 활용함으로써 초기투자비용 절감, 중복투자 방지, 기존시설 가동률 증대, 기존업체의 판매확대로 수익증대 및 가공비용 인하 가능성 ▷ 비용절감으로 학교급식 공급가 인상요인 배제. C/T의 지시에 따라 시군연합회가 공급한 농축산물이 입고되어 저장, 보관, 전처리, 가공, 소분되어 다시 C/T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인 도시지역 배송업체로 이동
- 배송업체 : 기존에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배송업체와 계약. 자치구 내의 중소형 SSM(100~150평 규모의 매장으로 차량, 저장고, 직원을 이미 갖추고 부분적으로 학교급식에 직배송하는 업체)과의 계약검토, 매장을 통한 공급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충남 농산물의 도시지역 전시 판매 가능
- 구매 : 농협을 구매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④ 기타

- 영양사에 대한 교육 및 등외품에 대한 발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가격 안정화
- 급식 공급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 필요 : 윤작 작부계획, 두과작물 및 잡곡류 등 기피 작물 장려 ▷ 지력증진, 환경보호 강화
- 수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자생력 구축. 3년 후 자체운영구조 확보
- 기존 업자를 통한 공급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도시 학교들의 도농교류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농업의 특성상 생산을 위해서는 공급필요시점의 1년 전부터 준비해야 가능

[참고. 2010 광역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육성 주요사업 발췌]

지역	사업명	사업량	지원사업비 (백만원)	비 고
전남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42,000ha	42,000 (도30:시70)	10ha이상, 공동영농단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21개시군/5 천명	200 (도20:시30:자50)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1,000개소	500 (도24:시56:보험시20)	도내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4,000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2%
	친환경농산물 자류농약 검사지원	986건	150(도30:시70)	무농약 확대 지원
전북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55개소	1,666 (도500:시666:자500)	10ha이상 단지 자급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 지원사업		90 (전액도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 입, 쌈채증심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도내 인증기관 5개소	40 (전액도비)	인증실적 대비 사후관리비용 지원
충북	친환경 무농약재배 농가육성	1,000ha	2,000 (도10:시40:자50)	저농약→무농약 견인, 과수 중심
	친환경농업 우렁이증패 지원사업	3,300ha	1,089 (도10:시40:자50)	집단지배지 우선
경북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11지구	5,626 (도24:시56:자20)	10ha 이상 공동이용 시설·장비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 사업	2개소	5,000 (도24:시56:자20)	자재·시설·장비 최대 3년 계속지원
	친환경들판조식 종합지원 사업	전 시군	1,600 (도336:시784:자480)	10ha 이상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사업	10개 시군 9,090㎡	1,000	수확농업지원 공동퇴비사, 10ha 이상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500ha	3,000 (도10:시40:자50)	인증단계 산하추진 대상, 자재비 지원
	친환경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 사업	2개소	500 (도24:시56:자20)	친환경농자재 수급안정화 생산비절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10,000명	200 (도30:시70)	소비촉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택배비) 지원	360,400건	1,802 (도20:시30:자50)	직거래 지원
제주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지원 사업	11개소	1,667 (국30:도30:자40)	시설, 장비, 차량 지원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 지원 사업	22개 조직	1,151 (도690:자461)	생산 유통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